



## 1968년—빌딩의 고층화

조국 근대화를 위한 건설의 메아리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은 이제 우리가 선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의 도시는 미증유의 인구 팽창을 보이고 왕성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심지의 건축물이 고층화하고 있음은 물론 교외로 뻗어 나가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실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이 나라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기술을 위시한 건축행정의 건설적인 비판과 건의 등을 다루며 학리의 탐구, 시공기술의 계몽, 작품활동의 현황 등을 건축사지는 취급하여 왔다.

1968년에 접어들면서 작년에 제기되었던 전통 문제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었다

전통의 계승—이것은 건축계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며 국력의 증가에 따라야 할 건축문화창조에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전통의 내재미와 외적인 형식미—이것은 우리가 문화의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된 과거의 국력에서 연유된 결과지만 이제는 지켜야 될 정조이며 찾아야 한다.

최근에 공공성을 가진 건물,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극장, 예술관, 호텔, 연구소 등 수많은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전통 문제와 작가의 창작성이 시대와 사회의 거울로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당장 20년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무질서한 철근 콘크리트의 사용—환경계획의 계속적인 수정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파괴가 멀지 않아 다시가 아닌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발길을 우회하게 만들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이상

도시는 다음의 다음 세대에 가거나 찾아볼 수 있게 될는지 그것도 의문인 것이다.

백평 이내의 매지에 성냥갑을 세워 놓은 것과 같은 10여층의 판자집과 같은 작은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당국의 보다 경제적인 대안이 없는 것일까?

같은 대지에 건물의 동수는 많지만 사용 공간이 적고 건축비가 많이 드는 현상을 바르 수도 서울 중심부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건축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도시 계획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이며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이 중하다.

혹자는—극도의 개인주의 현상이 빚은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도 증대한 문제다.

기왕 당국에서 대안을 마련중이면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가져주길 바란다.

미래의 인구와 자동차의 속도, 생활양식의 변천에 기초를 두지 않은 도시 계획과 대형건물의 조성은 멀지 않은 시간에 오류로 나타날 것이다.

건축술은 인류 생존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즉, 사회환경을 인류의 모든 생활 조건에 맞도록 하는 일이다.

환경계획 수립이 이 나라에 있어서 지상의 과제로 될 시기가 현재가 아닌 언제쯤일까?

또한 이 해에 우리가 기억하는 문제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의사당 신축 문제다.

두개의 국가 건물신축 문제에서 파생된 당국의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내것에 대한 불신이다. 이러한 사조를 국력에서 입은 사회적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프며 시정되어야 하겠다.

정부종합청사 설계변경에서도 한국 기술자의 기

### 전통 계승과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건축 행정의 정상화와 고층화

술 불신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사당에서도 한 사람의 한국기술자에게 설계를 맡길 수 없다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건축사법에 한 사람 건축사가 건축상의 여러 전문분야에 전문가로서 인정 받고 있는데 이는 모순인 것이다.

한 사람이 구조, 설비, 장식, 설계 등 건축설계의 전반에 관해 전문일 수 있는 현실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건축사들의 영세성이란 한 부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정책의 빈곤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관의 독선이다. 충분한 기술검토 제의를 거부한 정부 종합청사의 시공청인 총무처 당국과 본설계의 명실상부한 공개 현장 설계 경기를 사실상 거부한 국회 의사당 신축 사무를 보고 있는 국회 당국의 처사는 관료주의의 오도된 병폐다.

금년도 건축현황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같은 율의 건축 붐을 지속하고 있다.

년초에는 작년에 비해 상당한 건축 붐을 예상했으나 돌발적인 1·21 사태로 잠시 건축 붐이 주춤하였고 부동산 투기억제법으로 다소 주춤하였다.

사회현상으로 각 신문은 주택에 관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예년 보다 깊은 관심이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 따른 사고가 작년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산 전신 전화국 화재사건,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 남대문시장 화재 등에 있어서 소방관계가 대두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이 원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건축주—시공자—건축사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사는 특히 사회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공공성의 결여는 일차적으로 건축사고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이차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건설과 파괴라는 낱말을 빌려 변명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가 취

소, 철거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고하나 웬일인지 그 뒷처리를 볼 수 없고 미도파, 신세계 등에 주차장 설치를 발표한 그 결과도 마찬가지다.

또한 허가 없이 짓다가 발생이 생겨 사후 허가를 낸 빌딩과 시장이 몇개인가? 13층으로 허가 내어 설계 변경 없이 15층으로 증축하는 일은 시민이 알 수 없는 어떤 해결하는 비상한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권력과 금력은 만능을 자랑하는 것일까?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건축된 건물이 서울 시내 얼마든지 있다. 이는 무엇을 용변하고 있는 것일까?

무허가 건물 철거로 빚는 온갖 사고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원인은 건축주와 행정 당국의 단속 불철저의 책임이다.

철거를 싸고 난투극을 벌이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이를 보상한 전례가 없다고 버티는 서울시 당국의 처사는 무엇인가 이러한 처사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겠다.

행정의 선후가 바뀐 감을 우리는 일상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나 처리가 부진하여 이제 시민의 고발정신이 무감각한 상태로 되었다.

60년대는 서울의 고층화에 있어서 분수령을 이루었다.

특히 67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계획이 활발해짐과 더불어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 경쟁적으로 착공되고 있는데 서울의 지질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한다.

도시의 고층화는 선진국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추세로 이왕 세워질 고층 지대라면 보다 긴 안목으로 최소 50년 이후를 생각해서 도시 미화를 위한 조화된 빌딩가가 생기길 바란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백여년 전에 세워지고 계획된 세계의 몇 개 도시의 거리를 현재도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그대로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특히 서울의 도시 현실과 계획이 미래의 1천만 인구의 대도시 환경 조성에 얼마나 부적당한가를 연구해야 될 것이다.